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12.(화) 11:00 < 12.13.(수) 조간 > 배포 2023. 12. 12.(화)

한-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이행 체계 본격 가동

- 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('23.1.1.) 이후 제1차 공동위원회 열려(12.12일)
- 발효 1년 차 이행 점검 및 통상현안 논의를 통해 성공적 자유무역협정 이행 의지 확인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발효('23.1.1.)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제1차 한-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우리 측에서는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, 기획재정부, 해양수산부,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였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무역부 Djatmiko Bris Witjaksono 국제무역협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.

이번 공동위 계기, 양국은 상품무역, 경제협력,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통상현안 및 기업애로 사항 등 발효 이후 1년간의 협정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고 협정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. 특히, 인니의 수입허가제도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제기,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.

제1차 공동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"이행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양자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한-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"고 밝혔다.

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,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60억 불(35% 증가)로 크게 증가하였다. 올해부터 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2.7억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양국 교역액(억불): ('19)165 → ('20)139 → ('21)193 → ('22)260 → ('23.10)178.1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국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도화선 (044-203-575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 개요**

1. 공동위 개요

□ **목적**: 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* 이행현황 점검·평가 및 양측 통상현안 논의

* CEPA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: 협정 당사국간 상품·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·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

□ **일시/장소**: '23.12.11.(월)~'23.12.12.(화) / 인도네시아 발리

□ **참석자**

○ (한국)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관계부처 대표단

○ (인니) Djatmiko Bris Witjaksono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장, 경제조정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

2. 주요 논의 내용

□ **(상품무역위)** ❶양국 교역 현황 평가, ❷협정문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(HS코드)를 HS2022로 최신화, ❸인도네시아측의 수입허가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 제기 및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 상품 무역 현안 논의

*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(PI:Persetujuan Impor): 인니 산업 육성 위해 주요 품목군에 대한 수입물량을 사전 승인하는 제도

□ **(경제협력위)** 기획재정부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건설 및 제조 분야 협력 프로그램 등 추진 협의

□ **(관세및무역원활화위)**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(EODES*)과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진행

* EODES(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):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관세당국간 전자적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

□ **(공동위)** 공동위 절차규칙 채택, 분과위 논의 결과 보고 등 발효 1년간 이행 현황 점검 및 평가